

# 「충청광역연합의 현황과 미래」

## 6.3 지방선거 대응 토론회

---

일 시 : 2026년 5월 29일(금) 오후 3:00 ~ 5:30

장 소 :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

---

### 공 동 주 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순서

시 간	내 용
15:00	등록 및 참가자 안내
15:10	개회 및 인사말
15:20	【발표 1】 광역행정통합을 넘어 충청광역연합으로 발표: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50	【발표 2】 5극 3특 균형성장전략: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상 발표: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20	【종합토론】 청중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7:30	폐회

문의: 042-331-0092 / djcham@hanmail.net

발 표 1

---

## 광역행정통합을 넘어 충청광역연합으로

---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광역행정통합을 넘어 충청광역연합으로

- 충청권 공동발전의 현실적 대안과 과제 -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 광역 행정 통합의 편익은 비용을 압도하는가?

정치권이 말한 편익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놓고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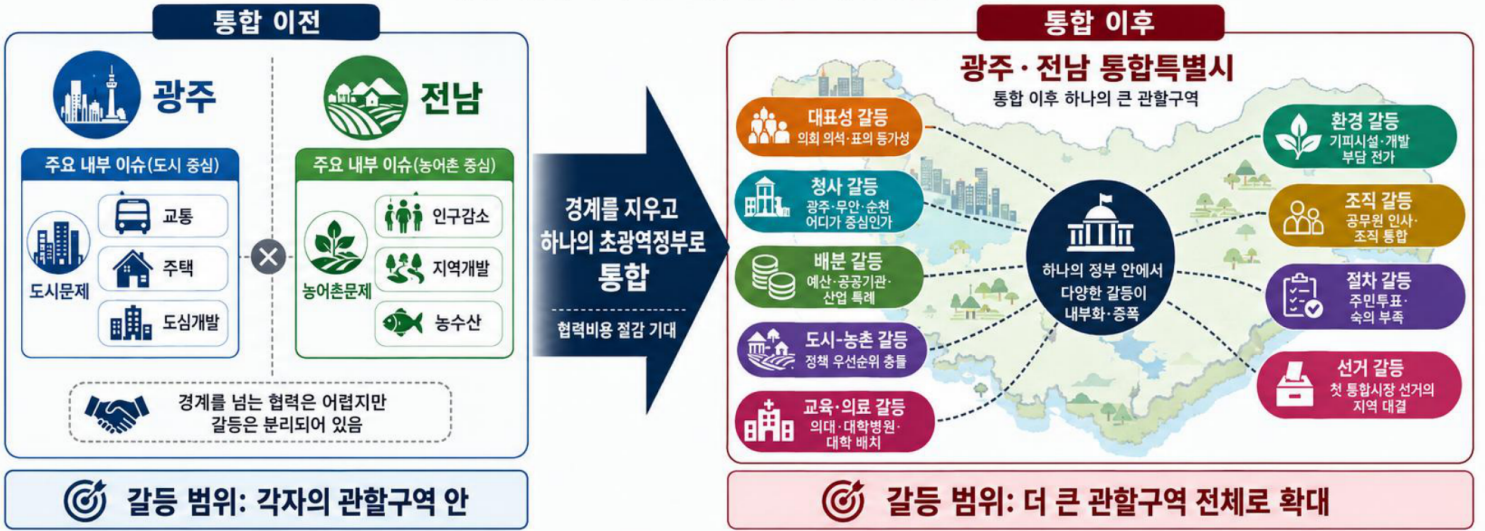
**핵심 메시지: 통합의 편익은 종종 개요적·정치적 수사로 제시되지만, 비용은 갈등·행정전환·매몰비용뿐 아니라 자기통치권과 지역정체성의 상실까지 포함한다.**

- ☑️ 기능적 협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가?
- ☑️ 편익이 정량적으로 입증되었는가?
- ☑️ 비가역적 비용까지 감수할 만큼 순편익이 큰가?
- ☑️ 헌법적 self-rule 포기까지 감수할 만큼 순편익이 큰가?

**직관적 판단**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지 않으면 신중해야 한다.

# 통합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이 통합 이후 내부화된다

광주·전남 사례가 보여주는 구조적 행정통합의 역할



**통합은 갈등을 없앤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내부화했다.**

통합 이전에는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문제를 다루는 수준이었다면, 통합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 중심과 주변, 대표성과 배분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하나의 정부 안에서 증폭된다.

- 대전·충남에 주는 시사점
- 경계를 지운다고 협력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 통합은 외부 갈등을 내부 갈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 기능적 협력 대안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 모듈화의 원리와 지방행정체제의 의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연결하는 접점 플랫폼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핵심 메시지:** 지방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운데 하나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모듈을 **연결·조정·재조합** 하는 **접점 플랫폼**이다.

# 모듈화 관점에서 본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두 방식

1번은 구조 중심의 한국형 접근, 2번은 다수준거버넌스에 근거한 기능적 협력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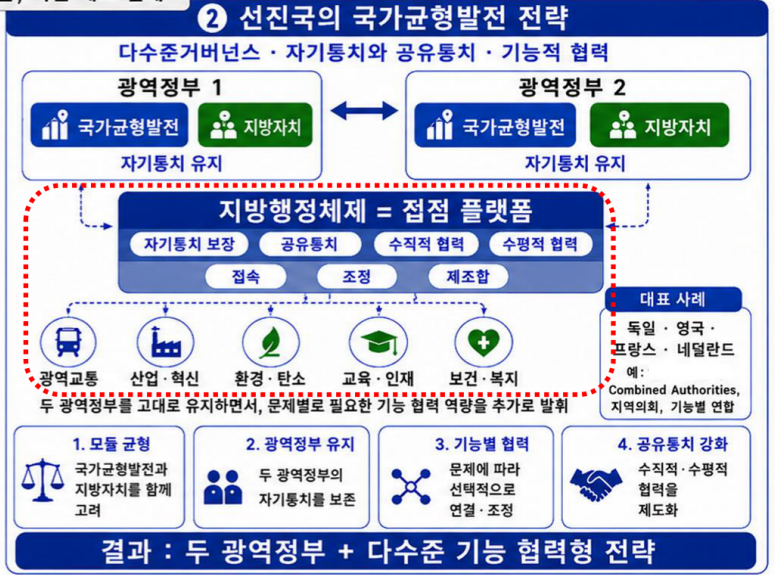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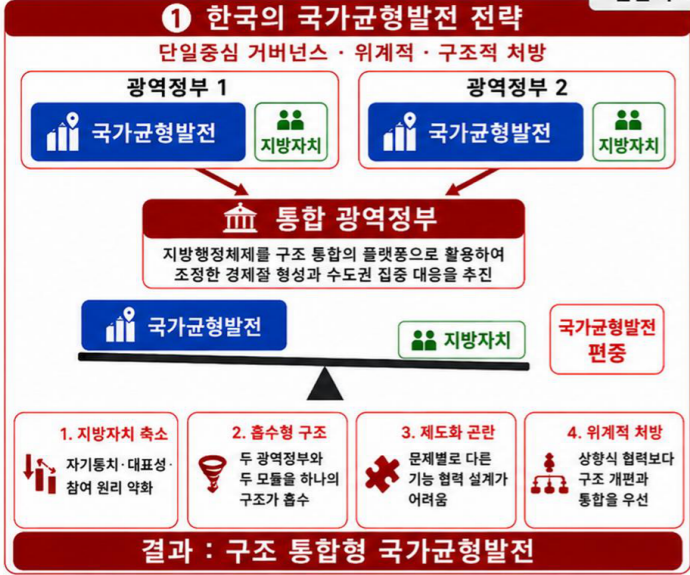
**모듈 A : 국가균형발전**

- 초광역 경제권
- 수도권 집중 대응
- 인프라·투자
- 국가공간전략

**모듈 B : 지방자치**

- 자기통치
- 주민대표성
- 주민참여·책임성
- 생활권 문제 해결

같은 두 모듈, 다른 제도 설계



## 문제별 재조합이 플랫폼형 지방행정체제의 핵심이다

고정된 행정구역보다 기능별 조합

정책 문제	모듈형 제도 조합
광역교통	광역정부 + 기초정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중앙재정
방위산업	대전 R&D + 충남 제조·시험 + 충북 부품 + 계룡·논산 국방망
돌봄	기초정부 + 읍면동 + 주민자치회 + 사회적경제
지역소멸	읍면 생활권 + 광역지원 + 중앙재정 + 주민조직
탄소중립	광역계획 + 기초 실행계획 + 마을 실천조직

모듈화된 지방행정체제는 정책문제마다 “적정한 공간·행위자·책임 구조”를 다르게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정부 통합 vs 광역정부연합

경성공간(hard space)과 연성공간(soft space)으로 이해하기

<h3>경성공간 (Hard Space)</h3> <p>법적 관할과 명확한 경계를 가진 영토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성 · 책임성</li> <li>권한 · 재정 명확</li> <li>시민참여 기반</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계 밖 대응 취약</li> <li>스케일 불일치</li> </ul> </div> </div>	<h3>연성공간 (Soft Space)</h3> <p>행정경계를 넘어 기능 문제에 맞게 유연하게 만들어지는 협력 공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광역 문제 대응</li> <li>경계횡단 협력</li> <li>문제별 맞춤 설계</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성 약화 위험</li> <li>조정비용 발생</li> </ul> </div> </div>
--	--

핵심 관계: 하드스페이스는 닻(anchor), 소프트스페이스는 연결장치(link)

□ 짧은 실선 경계 = hard space      점선·네트워크 경계 = soft space

### 광역정부 행정통합

논리: 경계가 작으니, 경계를 키우자

1개의 큰 self-rule

**더 큰 하드스페이스**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한 · 재정 일원화</li> <li>집행 속도</li> </ul>	<b>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elf-rule 축소</li> <li>더 큰 관료제</li> <li>경직적 대응</li> </ul>
--	---

### 광역정부 기능적 협력(광역정부연합)

논리: 자치권을 두고, 문제별로 연결하자

**하드스페이스 + 소프트스페이스**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자치권 유지</li> <li>의제별 협력</li> <li>생활권 맞춤 대응</li> </ul>	<b>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정 필요</li> <li>책임성 설계 필요</li> </ul>
--	--

**초광역 문제의 해법은 '경계 확대'보다 '기존 자치단위 위에 기능별 협력공간을 엮는 것'에 가깝다.**

## 대전·충남, 두 가지 선택의 길 | 자기통치(Self-rule)와 공유통치(Shared Rule)의 관점에서

- 구조적 통합 vs. 기능적 협력의 차이와 장단점 -

<h3>1 구조적 통합 (행정통합)</h3> <p>하나의 정부로 합치는 방식</p> <p><b>개념</b> 대전과 충남을 하나의 광역정부로 통합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단일 정부가 수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b>자기통치 (Self-rul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과 충남의 자기통치 단위가 소멸</li> <li>주민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거리가 멀어짐</li> <li>지역 맞춤 정책보다 획일적 정책 가능성 ↑</li> </ul> </div> <div style="width: 45%;"> <table border="1">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속도 향상</li> <li>행정·재정의 일원화로 중복 해소 가능</li> <li>대외적 대표성·협상력 강화</li> <li>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용이</li> </ul>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통치 약화, 민주성 저하</li> <li>지역 정체성 훼손 및 소외감 심화</li> <li>통합 과정의 혼란·비용 큼 (조직·인력·시스템)</li> <li>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li> </ul> </td> </tr> </table> </div> </div>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속도 향상</li> <li>행정·재정의 일원화로 중복 해소 가능</li> <li>대외적 대표성·협상력 강화</li> <li>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용이</li> </ul>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통치 약화, 민주성 저하</li> <li>지역 정체성 훼손 및 소외감 심화</li> <li>통합 과정의 혼란·비용 큼 (조직·인력·시스템)</li> <li>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li> </ul>	<p><b>비교 핵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통치</li> <li>공유통치</li> <li>의사결정 구조</li> <li>정책 유연성</li> <li>재정·비용</li> <li>위험과 지속성</li> </ul>	<h3>2 기능적 협력 (충청광역연합)</h3> <p>각자 자기통치를 유지하면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p> <p><b>개념</b> 대전과 충남이 자기통치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집행</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b>공유통치 (Shared Rul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통치 구조가 약화되거나 불필요해짐</li> <li>공동결정 기구의 역할 축소</li> <li>'하나의 중심'으로 권한 집중</li> </ul> </div> <div style="width: 45%;"> <table border="1">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과 충남의 자기통치를 유지</li> <li>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과 책임 지속</li> <li>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자율성 보장</li> <li>공유통치 구조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협력</li> <li>공동결정·공동재정으로 협력의 실효성 확보</li> <li>협약할 때 유연하게 협력 범위 확대</li> </ul>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시간 소요</li> <li>합의 도출의 어려움 (이해관계 조정 필요)</li> <li>공동기구 권한·재정이 미약하면 실효성 부족</li> <li>지속적 정치 의지와 제도적 설계 필요</li> </ul> </td> </tr> </table> </div> </div>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과 충남의 자기통치를 유지</li> <li>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과 책임 지속</li> <li>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자율성 보장</li> <li>공유통치 구조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협력</li> <li>공동결정·공동재정으로 협력의 실효성 확보</li> <li>협약할 때 유연하게 협력 범위 확대</li> </ul>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시간 소요</li> <li>합의 도출의 어려움 (이해관계 조정 필요)</li> <li>공동기구 권한·재정이 미약하면 실효성 부족</li> <li>지속적 정치 의지와 제도적 설계 필요</li> </ul>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속도 향상</li> <li>행정·재정의 일원화로 중복 해소 가능</li> <li>대외적 대표성·협상력 강화</li> <li>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용이</li> </ul>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통치 약화, 민주성 저하</li> <li>지역 정체성 훼손 및 소외감 심화</li> <li>통합 과정의 혼란·비용 큼 (조직·인력·시스템)</li> <li>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li> </ul>					
<b>장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과 충남의 자기통치를 유지</li> <li>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과 책임 지속</li> <li>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자율성 보장</li> <li>공유통치 구조를 제도화하여 실질적 협력</li> <li>공동결정·공동재정으로 협력의 실효성 확보</li> <li>협약할 때 유연하게 협력 범위 확대</li> </ul>	<b>단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 시간 소요</li> <li>합의 도출의 어려움 (이해관계 조정 필요)</li> <li>공동기구 권한·재정이 미약하면 실효성 부족</li> <li>지속적 정치 의지와 제도적 설계 필요</li> </ul>					

**핵심 메시지** 초광역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얼마나 크게 합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느냐"입니다.

통합은 지도 변경, 협력은 통치 방식 설계!

**충청광역 연합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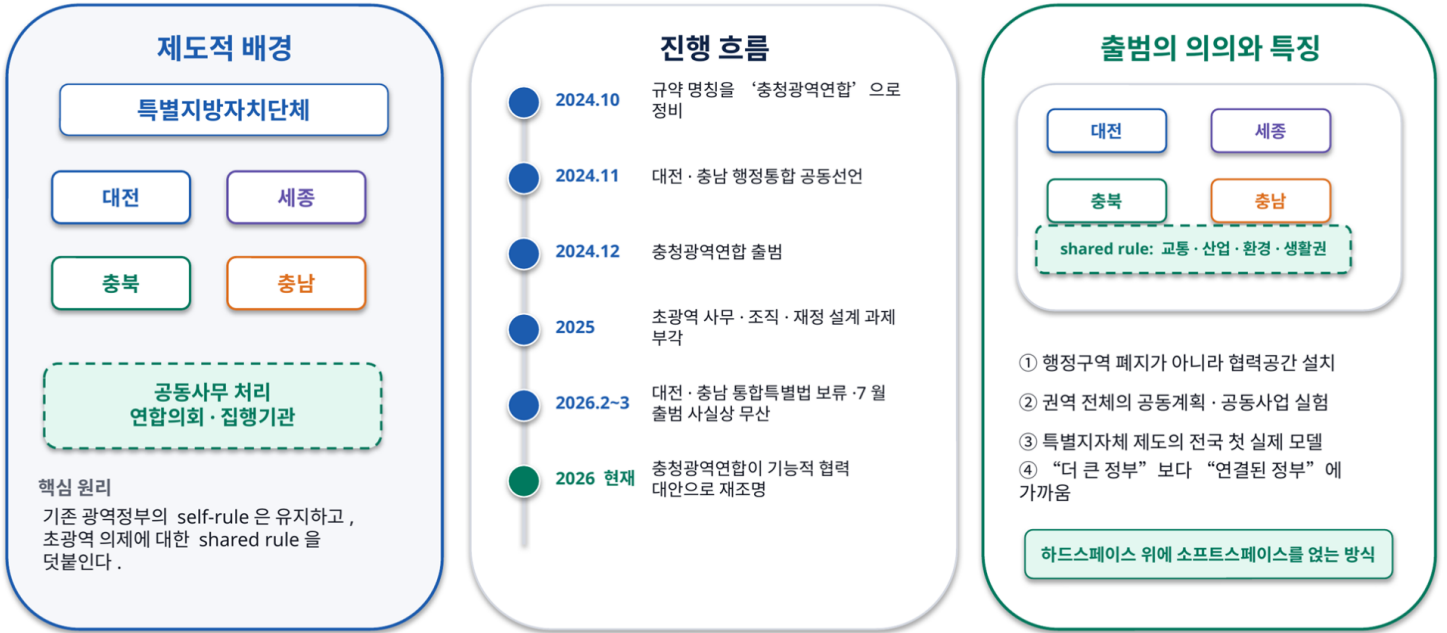
- 공통의제 선택과 집중
- 공동결정 구조 강화
- 공동재정 확대
- 작은 성공 (Small Wins) 축적
- 초광역 협력 모델 완성

자기통치는 지역을 살리고, 공유통치는 미래를 엽니다. 대전·충남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 초광역협력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 충청광역연합의 논의 진행과정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위에 세운 충청권 shared rule 플랫폼

전국 최초 특별자치체 · 4개 시도 참여 · 기존 자치권 유지 + 초광역 공동사무



요지 :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의 축소판이 아니라, 기존 자치단위 위에 초광역 협력공간을 제도화한 첫 사례다.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 충청남도 고시 · 충청광역연합 / 언론 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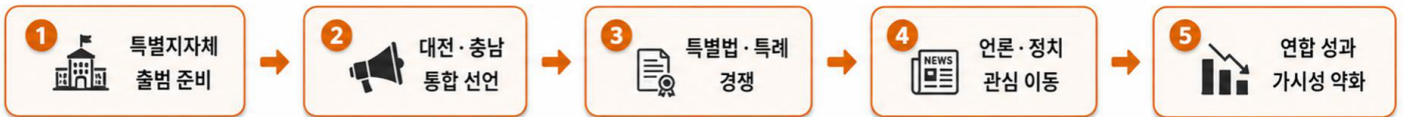
## 왜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프레임에 가려졌는가?

기능적 협력 플랫폼의 성과가 약하게 인식된 이유를 정치 · 제도 · 성과 · 프레임 차원에서 정리



핵심 진단 : 연합의 실패라기보다, 행정통합 의제가 연합의 성과 가시성을 압도한 구조

### 출범 전후의 흐름



**① 정치적 의제 선점**

- 수도권 일극 대응의 상징 의제
- 지방선거 전 ‘큰 그림’ 경쟁
- 단체장 리더십 과시와 주도권 확보

**② 제도 설계의 미성숙**

- 공동사무 · 재정 설계가 앞섰음
- 전문조직 · 집행역량이 충분치 않음
- 갈등조정 · 책임 규칙이 늦게 정비됨

**③ 성과의 성격 자체**

- 초기 성과는 조정 · 연계형 사무 중심
- BRT · 관광 · 채용 · 시설공유 등은 중요하지만 대규모 예산사업처럼 눈에 띄기 어려움

**④ 시민 체감과 공동브랜드 약함**

- 4개 시 · 도의 공동 브랜드가 약함
- 시민이 바로 느끼는 대표사업 부족
- ‘무엇이 달라졌나’에 대한 설명 부족

**⑤ 프레임 충돌**

- 통합 = 더 큰 hard space
- 연합 = 기능별 soft space
- 정치 · 언론은 통합 서사에 더 주목

**💡 핵심 해석**

**행정통합** : 경계 확대의 정치

**충청광역연합** : 공동결정권 설계와 기능협력의 실험

따라서 문제는 ‘연합이 쓸모없어서’라기보다, ‘행정통합 프레임 이 기능협력 플랫폼의 성장 시간과 성과 해석을 가려버린 것’에 가깝다.

# 왜 지금 충청권의 현실적 대안은 '광역연합'인가?

## 현재 상황



<b>1 이미 제도가 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광역연합은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li> <li>새 제도를 처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틀을 키우면 됨</li> <li>'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이 강점</li> </ul>	<b>2 통합보다 현실성이 높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통합은 법·조직·선거·청사·권한 재편까지 큰 갈등을 동반</li> <li>광역연합은 기존 자치단위를 유지한 채 공동사무부터 확대 가능</li> <li>정치적 비용은 낮추고 실행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음</li> </ul>	<b>3 선거 국면의 공백을 줄인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선거 시기에는 거대한 통합론보다 실행 과제가 더 중요</li> <li>교통·산업·환경·돌봄 같은 구체 의제를 바로 제시할 수 있음</li> <li>'언젠가 통합' 보다 '지금 협력'이 시민에게 설명하기 쉬움</li> </ul>	<b>두 접근의 차이</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b>통합만 기다리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쟁 장기화</li> <li>정치 의존</li> <li>즉시성과 낮음</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광역연합 실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즉시 실행</li> <li>기능별 협력</li> <li>제도 학습 가능</li> </ul> </div>
<b>4 광주·전남을 보며 비교 실험할 수 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주·전남은 통합모델, 충청권은 광역연합 모델을 시험할 수 있음</li> <li>두 모델의 성과·한계·재정효과를 비교하며 학습 가능</li> <li>충청권은 서두른 모방보다 제도적 대안을 정교화할 수 있음</li> </ul>	<b>5 self-rule을 지키며 shared rule을 만든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세종·충북·충남의 자치권은 유지</li> <li>초광역 교통·산업·생활권 서비스는 공동결정으로 추진</li> <li>'더 큰 통합정부'가 아니라 '공동결정권 설계'가 가능</li> </ul>	<b>6 충청권에 더 맞는 단계적 해법이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권은 4개 시·도가 얽혀 있어 2개 지역 통합보다 구조가 복잡한</li> <li>따라서 일괄 통합보다 단계적 협력 확대가 더 현실적</li> <li>성과를 쌓아가며 필요하면 이후 제도 발전도 검토 가능</li> </ul>	

따라서 현 시점의 충청권에는 '조속한 통합'보다, '이미 존재하는 충청광역연합을 실질적 기능협력 플랫폼으로 키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위한 핵심 과제

제도적 목적과 기능을 실현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 제도적 목적·기능
- 1. 초광역 공동문제 해결
  - 2. 공동결정·공동책임
  - 3. 기능별 협력
  - 4. 시민 체감 성과







**핵심 진단: 협력 실패가 아니라, 협력을 작동시키는 설계·관행·지원의 실패**

<b>1. 규범적 차원</b>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중심 사고가 협력을 하위 대안으로 봄</li> <li>'협력은 임시방편'이라는 인식</li> <li>공유통치(shared rule)의 정당성 약함</li> </ul> <p><b>개선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연합을 독자적 제도로 재정의</li> <li>self-rule 위에 shared rule 원리 명확화</li> <li>초광역 공공가치와 시민 편익을 분명히 제시</li> </ul>	<b>2. 법·제도적 차원</b>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한·재정·책임 구조가 약함</li> <li>공동사무 선정·의결·집행 규칙 미흡</li> <li>성과평가·환류·분쟁조정 장치 부족</li> </ul> <p><b>개선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사무를 선택·집중해 단계적으로 확대</li> <li>공동재정·분담원칙·인센티브 제도화</li> <li>의결·집행·평가·분쟁조정 규칙 정비</li> </ul>	<b>3. 행정문화(관행) 차원</b>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장·부서 중심 칸막이 관행</li> <li>'우리 지역 우선' 경쟁과 실적주의</li> <li>협의를 많고 실행은 약한 구조</li> </ul> <p><b>개선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기획·상설 실무협의·전담조직 강화</li> <li>협력 성과를 함께 만드는 관행 정착</li> <li>교통·환경·산업 등 작은 성공사례 축적</li> </ul>	<b>4. 중앙정부 역할 차원</b>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p><b>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극적 보충성(active subsidiarity) 부족</li> <li>설계·역량지원·재정지원 미흡</li> <li>광역연합 유인보다 통합 담론에 편중</li> </ul> <p><b>개선 방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하되 통제하지 않기' 원칙 확립</li> <li>특별지자체 맞춤형 재정·인력·컨설팅 지원</li> <li>협력 성과 인센티브와 제도 실험 허용</li> </ul>
--	---	---	--

따라서 충청광역연합의 과제는 '통합 대체재' 논쟁이 아니라, '공동문제를 풀 수 있는 협력 플랫폼'으로 제도와 관행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 현 제도 안에서 가능한 충청광역연합 실질화 방안

<b>1. 선도 공동사무 재설정</b>	<b>2. 4개 시·도지사 전략회의 정례화</b>	<b>3. 분야별 공동정책위원회 설치</b>	<b>4. 공동기금·재정협약 마련</b>	<b>5. 사무국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b>	<b>6. 성과관리·시민보고·공론화</b>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제가 많으면 책임과 성과가 흐려짐</li> <li>시민이 체감할 대표사업이 부족함</li> </ul>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는 협의는 많아도 최종 결단 구조가 약함</li> <li>단체장 정치 일정에 따라 연합 의제가 흔들림</li> </ul>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무 협의만으로는 안전 발굴과 집행 연결이 약함</li> <li>분야별 이해조정 창구가 필요함</li> </ul>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돈이 없으면 협력은 선언에 머무름</li> <li>분담 원칙이 없으면 갈등이 반복됨</li> </ul>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행정지원만으로는 전략·조정 기능이 약함</li> <li>연합 차원의 지속적 추진 연진이 필요함</li> </ul>	<b>왜 필요한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를 설명하지 못하면 연합의 존재감이 약함</li> <li>시민 참여가 약하면 정당성과 지속성이 떨어짐</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교통, MICE·관광, 금강유역 환경보호, 혁신산업에 우선 집중</li> <li>'착지안 현실성 성과' 중심으로 2~3개 선도사업 선정</li> <li>연도별 우선순위와 성과목표를 공개</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별 전략회의 정례 개최</li> <li>공동현안 발굴·우선순위 결정·이행점검까지 연계</li> <li>합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동 발표</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MICE·환경·산업별 공동정책위원회 구성</li> <li>실무자 + 전문가 + 필요시 공공기관 참여</li> <li>안전 발굴 → 사업기획 → 집행점검의 상설 구조화</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시·도 공동기금 조성 협약 체결</li> <li>수혜와 기여를 반영한 분담 원칙 마련</li> <li>중앙정부 매칭사업 공동 발굴 및 공동 건의</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국을 정책기획·조정 중심으로 재편</li> <li>핵심 의제별 프로젝트 관리 기능 부여</li> <li>성과 자료 축적, 대외 협력, 일정 관리 전담</li> </ul>	<b>실행 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동시간, 환승편의, 행사유치, 관광채류, 국비확보 등 지표 설정</li> <li>매년 '충청권 초광역협력 시민보고서' 발간</li> <li>속의형 공론장과 시민 의견수렴 정례화</li> </ul>

 4개 시·도 협약
 충청광역연합 규약 개정
 운영규칙 정비
 공동기금 협약
 공동위원회 설치
 성과지표·시민보고 제도화


**결론: 충청광역연합의 실질화는 '통합 대체 논쟁'이 아니라, 현재 제도 안에서 공동사무·공동결정·공동재정을 작동시키는 운영 혁신의 문제다.**

##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

<b>1.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선</b>	<b>현행 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변경 절차 경직</li> <li>수행 사무가 제한적</li> <li>독자 재정기반 부족</li> <li>의결 구조의 구속력 약함</li> <li>조직·인사 자율성 부족</li> </ul>	<b>개선 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운영 자율성 강화</li> <li> 기능·권한 확대</li> <li> 재정기반 확보</li> </ul>	<b>핵심 개선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li> <li>공동사무 범위 확대(교통·환경·산업·생활서비스)</li> <li>국가사무의 포괄적 위임 근거 마련</li> <li>독자적 계획 수립·집행 권한 부여</li> <li>공동기금·사용료·수수료 등 자체 재원 근거 마련</li> <li>국비 매칭·포괄보조 지원 근거 제도화</li> <li>정원·직제·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li> </ul>	
<b>2.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 개선</b>	<b>현행 한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협의 중심으로 실효성 약함</li> <li>초광역 의제 상정·조정 기능 부족</li> <li>중앙부처 이행 점검 장치 미흡</li> </ul>	<b>개선 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에서 조정으로</li> <li> 초광역 의제 공식화</li> <li> 이행 점검 강화</li> </ul>	<b>핵심 개선 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지방자치단체 안건의 정기 상정 제도화</li> <li>중앙부처-광역연합 간 공식 협의 채널 설치</li> <li>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권한 강화</li> <li>회의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li> <li>이행 점검 보고와 공개 제도 도입</li> </ul>	
<b>3. 기타 필수 제도 개선</b>	 <b>초광역협력 기본법(가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광역협력의 원칙·절차·재정·평가 통합 규율</li> <li>특별지방자치단체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연계 명확화</li> </ul>	 <b>성과평가·인센티브 제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광역협력 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li> <li>우수 협력사례에 재정·권한 인센티브 부여</li> </ul>	 <b>시민참여·민주적 통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공개·공론장·시민참여위원회 제도화</li> <li>연합 의회와 시민보고 체계 강화</li> </ul>	 <b>분쟁조정·갈등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간 이해갈등 조정 절차 명문화</li> <li>사업별 비용분담·성과배분 원칙 제도화</li> </ul>


**핵심 방향: 형식적 협의기구를 넘어, 권한·재정·책임·민주적 통제를 갖춘 실질적 초광역 거버넌스로 전환**

#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의 역할

정부 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사회도 하드스페이스를 넘어 초광역 공동행위자로 전환해야 한다

## 1. 핵심 진단 : 시민사회도 하드스페이스에 갇혀 있었다



**대전**  
대전 경제 안의 문제에 집중



**세종**  
세종 자족성 중심 사고



**충북**  
충북 내부 의제 중심



**충남**  
충남 내부 의제 중심



정부만 행정구역에 갇힌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도 각 광역정부의 경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익숙했다.

### 공통 한계



방법론적 영토주의



행정구역 중심 사고



초광역 공동의제 부족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 역량 미흡

## 2. 왜 문제가 되는가?



- 교통·산업·환경·돌봄 문제는 이미 경계를 넘고 있다
- 초광역 의제가 없으면 충청광역연합은 행정 주도 기구에 머문다
- 시민사회가 빠지면 민주적 정당성과 공론화가 약해진다
- 통합 찬반을 넘어 기능별 협력 대안을 만들 주체가 필요하다

## 3. 역할 전환 : 지역별 시민단체 → 초광역 공동행위자

### 기존 시민사회

- 지역 내부 감시자
- 개별 광역정부 상대
- 지역별 이해 대변
- 행정통합 찬반 대응
- 사후 비판 중심



### 전환해야 할 시민사회

- 초광역 의제 형성자
- 충청권 공동 거버넌스 상대
- 권역 전체 공공가치 조정자
- 기능적 협력 대안 설계자
- 사전 의제화·정책공동생산

감시자에서 공동 의제 형성자·공공가치 번역자·협력 플랫폼 설계자로

## 4.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위한 시민사회 제안



**1** 충청권 시민사회 공동 TF 구성  
대전·세종·충북·충남 시민단체 연결



**2** 초광역 공동의제 선정  
광역교통·MICE·금강유역 환경보호·돌봄·인구위기



**3**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후보질의·공동선언·정책협약 추진



**4** 민주적 통제장치 설계  
정보공개·시민공론장·시민보고서·평가체계



**5** 광역연합 파트너십 제도화  
연합 의제위원회·속의기구·시민참여 구조 요구

# 충청광역연합 의제 예시: 2027 유니버시아드와 금강유역 공동전략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이유와 실행 전략



## 의제 1. 2027 유니버시아드 계기 충청권 MICE 산업 육성



국제회의



전시·박람회



관광·체험

### ? 왜 충청권 의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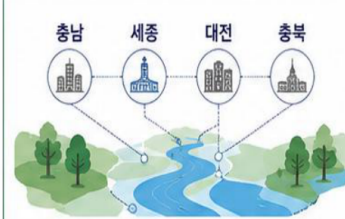
-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공동 실행장
- ✓ 대전의 MICE 인프라와 연구역량을 충청권 자산으로 확장
- ✓ 세종·충북·충남의 행정·산업·관광 자원과 연계 가능
- ✓ 단일 도시 경쟁보다 공동 브랜드가 국제경쟁력 강화

### 🎯 추진 전략

- 1 충청권 공동 MICE 비전·브랜드 수립
- 2 기능 분담: 대전(국제회의)·세종(행정회의)·충북(전시·바이오)·충남(관광·대형행사)
- 3 공동 마케팅·공동 유치 체계 구축
- 4 숙박·교통·관광 패키지와 공동 관광패스 연계
- 5 전문인력 양성 및 행사 후 레거시 산업화



## 의제 2. 금강유역 환경보호 공동전략



수질개선



생태복원



상수원 보호



기후대응

### ? 왜 충청권 의제인가?

- ✓ 금강·대청호는 4개 시·도의 공동 생태·생활 기반
- ✓ 상류·하류가 연결된 유역 문제는 개별 행정으로 해결 곤란
- ✓ 수질·생태·상수원·기후재난 대응은 초광역 협력 필요
- ✓ 환경보호는 시민 체감이 큰 공동 공공가치 의제

### 🎯 추진 전략

- 1 4개 시·도 + 금강유역환경청 + 시민사회 공동거버넌스 구축
- 2 공동 조사·데이터 공유·유역 단위 통합 모니터링
- 3 수질개선·생태복원·상수원 보호 공동사업 추진
- 4 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재난 공동 대응체계 마련
- 5 속의형 시민참여와 환경영향 정보공개 제도화

# 지방선거 이후 충청광역연합 실질화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

**핵심 전략**

- 공동의제 선택과 집중
- 공동결정 구조 강화
- 공동자금·재정 확보
- 시민 체감 선도사업 추진
- 성과공개·시민참여 제도화

1단계 기반 구축	2단계 선도사업 착수	3단계 제도 안정화	4단계 성과 확산·미래 선택
<p><b>취임 후 1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시·도지사 전략회의 정례화</li> <li>충청광역연합 실질화 공동협약</li> <li>사무국 정책기획 기능 강화</li> <li>공동자금 조성 협의 착수</li> <li>선도의제 2~3개 선정</li> </ul> <p>성과: 협력 틀 정비</p>	<p><b>임기 2~3년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교통 시범사업 추진</li> <li>2027 유니버시아드 연계 충청권 MICE 협력</li> <li>금강유역 환경보호 공동사업 착수</li> <li>혁신산업 공동투자·유치 협력</li> <li>공동 관광·마케팅 시범운영</li> </ul> <p>성과: 시민 체감 사업 가동</p>	<p><b>임기 3~4년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공동정책위원회 정착</li> <li>공동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li> <li>시민보고서·공론장 정례화</li> <li>중앙정부 지원 패키지 확보</li> <li>사업별 성과평가 및 보완</li> </ul> <p>성과: 공동결정 플랫폼 정착</p>	<p><b>임기 후반~중장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청권 초광역협력 시민보고서 발간</li> <li>광역연합 강화 vs 통합 등 복수 대안 공론화</li> <li>주민주권 원칙에 따른 시민판단</li> <li>성공모델의 제도화·확산</li> <li>차기 초광역 로드맵 수립</li> </ul> <p>성과: 성과 기반 미래전략 확정</p>

**대표 선도의제**

- 광역교통
- 충청권 MICE
- 금강유역 환경보호
- 혁신산업 협력

**결론:** 충청광역연합의 실질화는 ‘조속한 통합’ 논쟁보다, **작은 성공을 축적**하며 **공동사무·공동결정·공동재정**을 작동시키는 단계적 전략의 문제다.

발 표 2

---

## **5극 3특 균형성장전략: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상**

---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 5극 3특 균형성장전략; 충청권 초광역 교통망 구상 및 충청광역연합의 역할

**이재영**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 차 례

- I. 이재명정부 5극3특 전략
- II. 수도권 1극과 충청권 잠재력
- III. 광역·초광역교통망 필요성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V. 결론 및 정책제언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I. 이재명정부 5극3특 전략



I. 이재명정부 5극 3특 전략

핵심 국정 방향

기술주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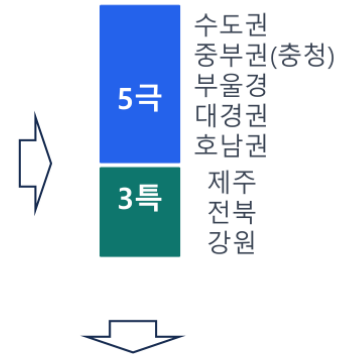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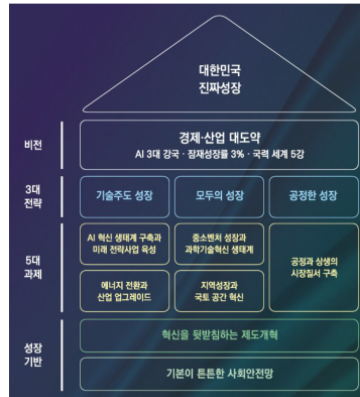
AI·과학기술·에너지전환

모두의 성장

중소벤처·지역성장

공정한 성장

사회안전망·시장질서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충청권(중부권) 위상 변화

- 대전광역권 → 중부권
- 지역범위: 충남·충북까지 확대
- 5극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격상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Ⅱ. 수도권 1극과 충청권 잠재력



Ⅱ. 수도권 1극 집중의 문제

**50.3%**

전체 인구 집중  
면적 11.8% 불과

**55.0%**

청년인구 집중  
지방 이탈 가속

**86.9%**

1천대 기업 집중

**13배**

전철 밀도 차이  
서울 vs 대전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 구조



합계 출산율 비교 (2000→2019)

수도권 살기  
좋아졌다?

구분	2000	2019	감소율
전국	1.48	0.92	▼ 37.8%
수도권	1.42	0.85	▼ 40.1%
서울	1.28	0.72	▼ 43.8%
지방	1.53	1.01	▼ 34.0%

자료: 통계청, 감사원 인구구조 대응실태보고서

#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

## 수도권 G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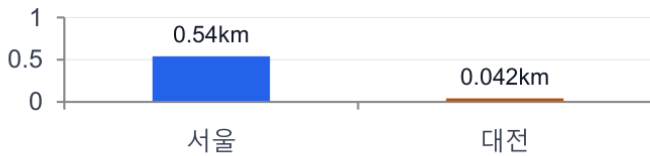
- 이미 1개 노선 개통
- 계획 규모: **134조 원**
- 수도권 30분 내 연결 목표

## 비수도권 CTX

VS

- 비수도권 통틀어 유일
- 규모: CTX(충청 최대 사업; **5조 원**)
- 운영비·요금 부담 문제 상존

### 전철 밀도 비교 (km<sup>2</sup>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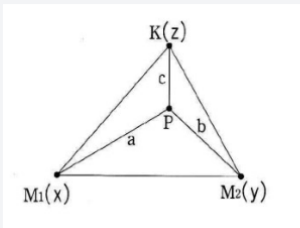
### 청주공항 문제

- 수요 급증에도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부재
- 충청권 내 접근 교통망 열악
- 수도권 접근계획 多, 충청권 연계망 부족
- 주차장 만차 상태 일상화

# 충청권(중부권)의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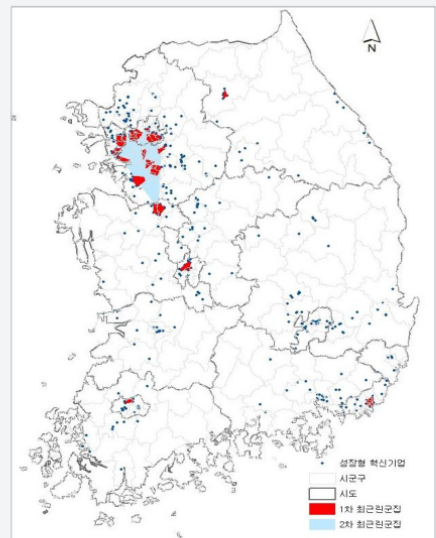
## 지리적 중심성

- 수도권 인접 + 국토 중심
- 호남·영남·수도권 연계 최적지
- 철도 총통행시간 지리적 접근성 최우수
- 입지이론상 수송비 최소화 지역



## R&D 혁신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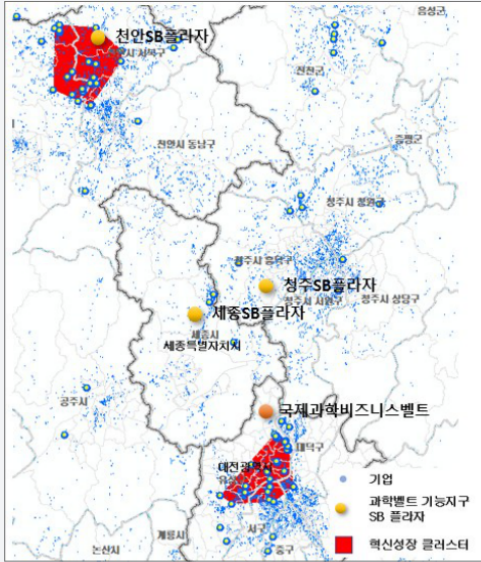
- 수도권 제외 전국 최대 혁신성장클러스터
- 박사학위자 14.3% 연구 종사
- 대전: 국가 R&D 허브
- 세종: 행정수도 + 데이터기반 도시



✓ 기능적·공간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충청권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엔진

## 충청권(중부권)의 잠재력

연구기능이 지역별로 분산=>집적이익 약화



• 기초과학연구원~청주공항 : 대중교통130분

✓ 기능적·공간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충청권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의 성장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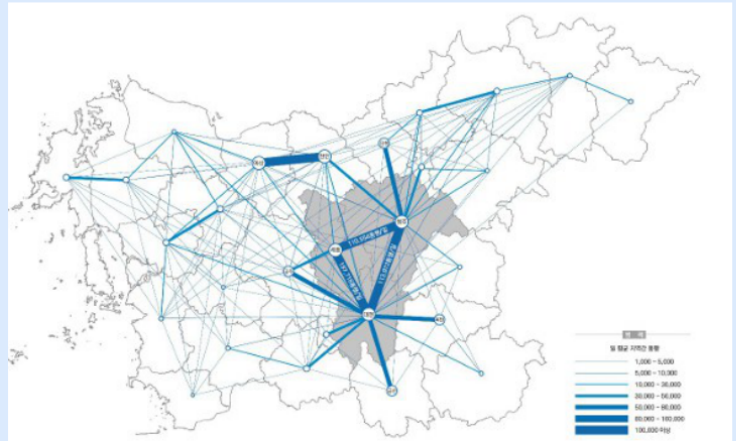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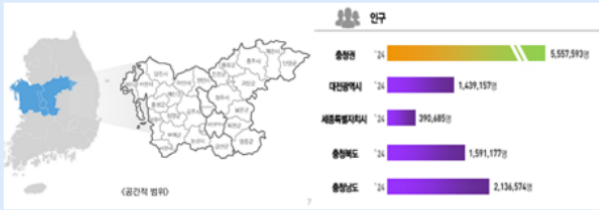
### Ⅲ. 광역·초광역교통망 필요성



### Ⅲ. 충청권 초광역 및 광역 교통망

#### 1) 현황

- 인구 : 560만명(10.8%)
- 면적 : 16,659km<sup>2</sup>(16.6%)



### Ⅲ. 충청권 초광역 및 광역 교통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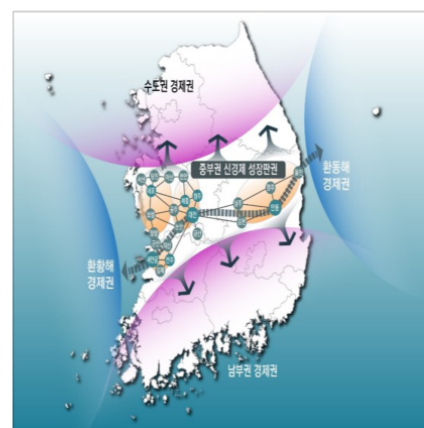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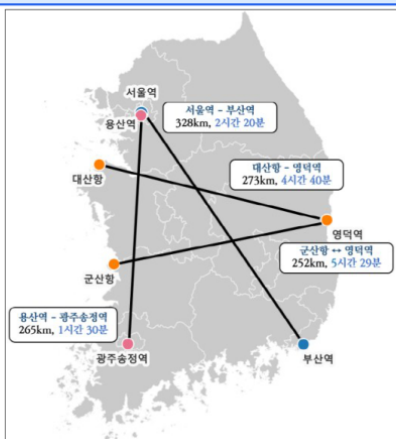
#### 2) 초광역 교통망 과제\_수도권 대체 새로운 경제축 육성

현황: 남북축 중심

- 고속철도 657.4km 중 동서축 전무
- 서울~부산 328km → 140분
- 대산항~영덕 273km → 280분 (2배)
- 군산~영덕 252km → 329분 (3.1배)
- 충청·경북 동서축 산업화에서 소외

환황해·환동해 경제축 연결

새만금(환황해) ↔ 충청 ↔ 영덕(환동해)  
북극항로 개척시 환동해권 역할 확대 기대



## Ⅲ. 초광역 교통망 — 열십자 고속철도망 구상

### 열십자 고속철도망 전략

동서축(동서균형발전 고속철도) + 남북축(한반도 KTX) = 결절점 충청권

#### 구상: 동서균형발전 고속철도

- 총연장 432km (CTX 포함)
- 당진~청주공항(92) · 새만금~대전(95)
- 대전~세종~청주공항(72) · 청주공항~영덕(173)
- **군산~영덕 1시간 30분으로 단축**
- 사업비: 16조 3,000억원

#### 구상: 남북 한반도고속철도

서울~세종~전주~여수간 시속 350km급 KTX

- 1구간: 서울(잠실)~용인~청주공항(JTX\_민자 적격성 조사 중)
- 2구간: 청주공항~대전(CTX\_민자사업 확정)
- 3구간: 대전/세종~순천~여수



## Ⅲ. 초광역 및 광역 교통망

### 3) 광역 교통망 과제\_

#### 현황:

- 대전권 광역철도는 없음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35.2km 구간에 대해 노선을 신설 중

동서축이 보완되어 대도시권과 주변 혁신거점, 중소도시 연계가 강화된 50분 생활권 실현



자료: 정용일(2025), 충청초광역권 광역철도망 구상, 2025년 대전정책엑스포 자료집(2025.11.6.)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 필요

## 4) 지방부 광역망 공급 한계; 예타제도

문제: 1999년 도입 이래 경제성 중심 → 낙후 지방도시 인프라 공급 구조적 장애

### ① 예타 기능·범위 조정

지방소멸 생존이 걸린 현실에서  
단순 경제성 중심 예타의 존재이유  
약화  
→정주여건 목표도달까지 예타면제

### ② 초광역 인프라 정책성 평가

3개 지역 이상 통과 초광역 인프라  
는 '정책성평가'만으로 타당성 인정  
→ 지방시대위원회·국무총리실 주  
관

### ③ 경제성 분석 방법론 개선

트램 등 저비용 교통수단 편익 반영  
어려움  
→ 건설비 낮을수록 가중치 부여  
→ 지방 재정 어려운 지역 국고 차  
등 지원

유럽 2~30만 도시에 트램이 다니는 현실 → 한국 중소도시는 도시철도 구경조차 못 하는 역차별 해소 시급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1) 광역교통문제점

2가지 광역체계; 충청광역연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파에 떨어 기다렸는데 "버스 파업"...경기도민 안 내문자도 못 받았다

박보우 기자 2020. 1. 13. 14:58

📷 📷 📷 📷 📷 📷



서울 시내버스가 출퇴근에 들어오는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광판에 시내버스 노선과 대기열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도의 도민들 출근길에도 불편이 빚어졌다. 특히 일부 지역 도민은 파업 관련해 어떤 안내 문자도 받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13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파업 결정 이후 전날 오후 8시쯤 고양·성남·안양 등 일부 지역에는 재난 문자를 통해 파업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했다.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1) 광역교통문제점

요금차이

세종시 운영 노선(B2/990번)과 대전시 운영 노선(B1/1001번)으로 분리 운영 =>요금차이



1시간 24분 | 도보9분 | 환승없음 | 요금 2600원 | 51.9km ▲

1시간 25분 | 도보20분 | 환승1회 | 요금 1,700원 ~ 2,000.. ▲

### 요금체계 분절이 말해주는 것

#### ① 행정경계가 요금경계

지자체별 독립 요금체계 유지  
→ 주민은 경계 넘을 때마다 추가 부담  
→ 대중교통 이용 유인 저하

#### ② 통합조정기구 부재

광역환승 협약은 개별 협상으로 구축  
→ 논산·금산·옥천 등 미포함 지역 다수  
→ 충청권 전체 통합 불가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1) 광역교통문제점

#### 광역행정

##### 충청권 광역연합 현황

- 4개 시도 공동 운영 (2026 예산 56억)
-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조례
- 광역투어패스 출시 (2025.7.30)
- 광역교통체계 정비 연구용역
- 충청권 UAM 로드맵 연구용역

##### 광역연합의 한계

- **핵심 사안(교통·수계) 사무 제외**
- 예산 56억 → 실행력 미흡
- 의사결정 독립성 부족
- 광역철도 자원분담 이해충돌 지속
- 광역BRT 노선 신설 지자체간 갈등

## IV. 광역연합/행정통합을 넘어서

#### 통합특별시는 다른가?

##### [ 광역교통기본계획 (20년) ]

###### 광역시장

##### ✓ 의견청취 대상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시장 의견을 청취해야 함  
(광역교통법 제3조①)

###### 통합특별시장

##### ✓ 의견청취 + α

의견청취에 더해 지원위원회를  
통한 반영 요청까지 가능  
(통합법 제12조)

##### [ 광역교통시행계획 (5년) ]

##### ✓ 의견 제출만 가능

국토부에 의견 제출 권한 보유  
(광역교통법 제3조의2, 제5조)

###### 통합특별시장

##### ✓ 의견제출 + 불이익 방지

통합특별시에 불이익 없도록  
명시적 보장 (통합법 제118조②)

## 도로 건설·비용 지원 특례

### 광역도로 건설·개량비용

[광역시장] 광역도로 건설·개량비 국고 보조  
(광역교통법 제10조①)

+

[통합특별시장] 동일하게 국고보조  
+ 투자진흥지구·산림이용진흥지구 연계도로,  
광역도로, 교통혼잡도로, 고속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재정지원 요청 가능  
(통합법 제119조)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광역시장] 도로법 제8조 기준 선정·지원 (50%)  
(일반 기준 적용)

+

[통합특별시장] 중전 광주광역시 동(洞) 지역에 더해  
중전 전라남도 등 지역도 선정기준 포함  
사업비(조사·설계 포함) 50% 이상 국고보조  
(통합법 제125조)

### 광역교통시설 운영비 (광역철도 제외)

[광역시장] 해당 없음  
광역교통법은 건설·개량비용만 규정  
(운영비 국가 부담 조항 없음)

+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조기안착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운영과정 발생비용을  
국가가 부담 가능 (통합법 제118조③)

## 철도·버스·BRT·교통약자 지원 특례

### 초광역 교통사업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시장: 해당 없음

→

통합특별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된 초광역 교통사업  
연장·확대 시 추가사업비 일부 국비 지원  
(통합법 제122조)

### 광역버스 운영비 재정지원

광역시장: 국토부 지정 광역버스 운송사업 운영비를  
국가·지자체가 협의 부담  
(광역교통법 제10조의2①②)

→

통합특별시장: 동일하게 국가·지자체 부담 적용  
+ 벽지노선 운행 손실 일부 국가 지원 가능  
(통합법 제134조①)

### 간선급행버스(BRT)

광역시장: 일반 기준 적용

→

통합특별시장: 모빌리티혁신법상 규제특례 부여 시  
자동차관리법 제29조④ 미적용 가능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비 국가 지원  
(통합법 제126조)

###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광역시장: 일반 기준 적용

→

통합특별시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도입비용 국가 지원 가능  
(통합법 제134조④)

## 환승센터·균형발전·교통물류거점 특례

### ☑️ 균형발전 교통망 구축 요청

광역시장: 해당 없음



통합특별시장: 광역생활권·산업단지 등 연결 교통망 구축 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 요청 가능 (통합법 제120조)

### 🏠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 건설·개량

광역시장: 공공기관·지방공사 시행 시 국고보조·용자  
(광역교통법 제10조⑨)



통합특별시장: 동일하게 국고보조·용자 수령  
+ 복합환승센터 구축 요청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기본계획 우선 반영  
(통합법 제142조④)

### 📦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

광역시장: 해당 없음



통합특별시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통물류거점 지정 요청 시  
국토부 장관 우선 검토  
(통합법 제135조)

### 🚆 광역철도 건설비 분담 (도시철도 포함)

광역시장: 노선구간 사업비 기준 국가·지자체 분담  
시·도 간 협의로 분담률 결정  
(광역교통법 제10조②③)



통합특별시장: 동일 (광역철도·도시철도 건설비 분담은 동일 기  
준 적용)

## <비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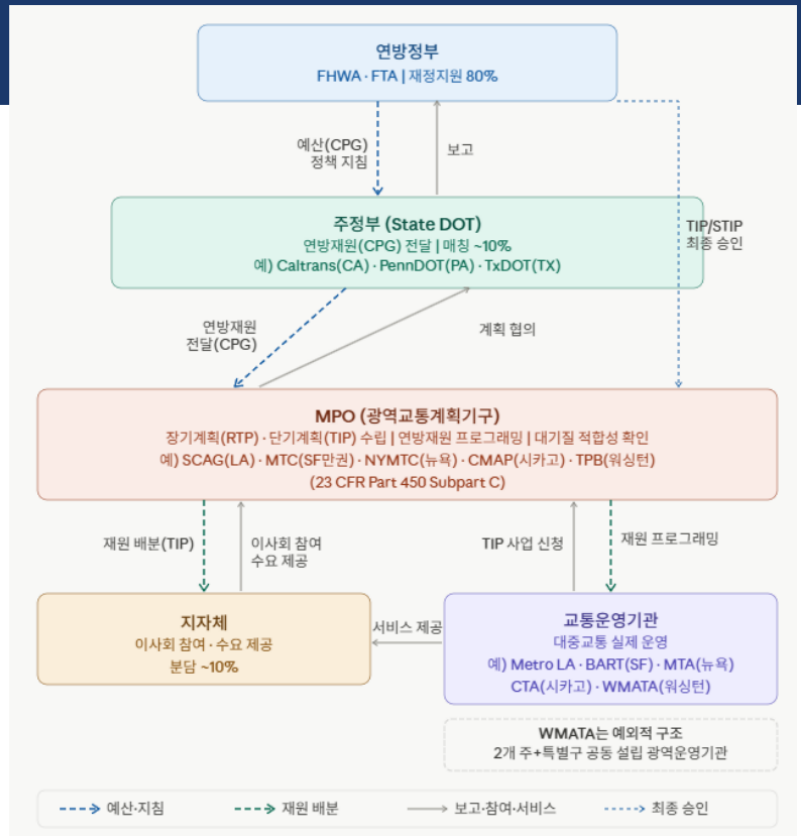
비교 항목	광역시장 (광역교통법)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법)	추가 혜택
광역교통기본계획	의견청취	의견청취+ 반영요청	✓ 지원위원회 반영 요청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의견제출	의견제출+ 불이익 방지	✓ 명시적 불이익 방지 보장
광역교통시설 운영비	규정 없음	국가 부담 가능	✓ 조기안착 목적 국비 지원
초광역 교통사업	해당 없음	추가 국비 지원	✓ 연장·확대 시 국비 지원
교통혼잡도로	50% 일반 기준	전남지역 포함 50%↑ 국고보조	✓ 적용 지역 확대
광역버스 운영비	국가·지자체 분담	동일+벽지노선 손실 지원	✓ 벽지노선 추가 지원
BRT 간선급행버스	일반 기준	규제특례+친환경 도입비 국비	✓ 규제특례 + 도입비 지원
환승·복합환승센터	국고보조·용자	동일+우선반영 요청권	✓ 기본계획 우선 반영 요청
교통물류거점 지정	해당 없음	우선 검토 요청권	✓ 국토부 장관 우선 검토

# 해외 사례 ① 미국 MPO 광역교통행정체계

## 독립기구 and 계획과 운영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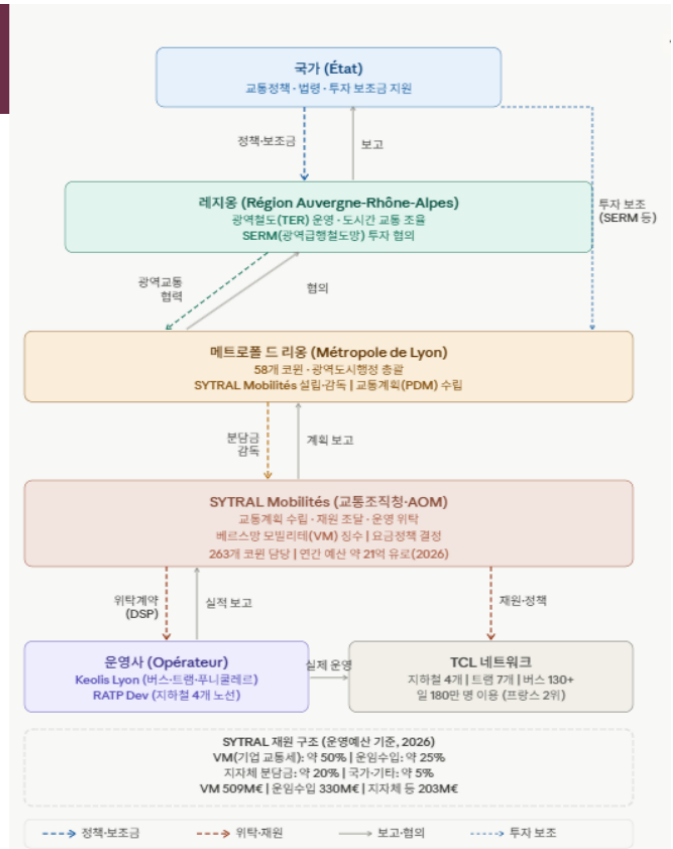
- CPG : Consolidated Planning Grant: 통합계획교부금
- FHWA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연방도로청
- FTA :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연방대중교통청
- 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부
- MPO :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광역교통계획기구
- RTP : Regional Transportation Plan: 광역교통계획 (20년 장기)
- TIP :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교통개선프로그램 (4년 단기)
- STIP : Statewid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 주 단위 교통개선프로그램
- TMA : Transportation Management Area: 교통관리지역 (인구 20만 이상)
- WMATA :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워싱턴 광역대중교통청



# 해외 사례 ② 프랑스 리옹 SYTRAL Mobilités

## 독립기구 and 계획과 운영 통합 국비 외 별도 운영재원 세입

- AOM : Autorité Organisatrice de Mobilité - 교통조직청
- DSP :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 공공서비스 위탁계약
- PDM : Plan de Déplacements Métropolitain - 대도시권 이동계획
- SERM : Service Express Régional Métropolitain - 광역급행철도망
- TCL : Transports en Commun Lyonnais - 리옹 대중교통 네트워크 (2025.9부터 Cars du Rhône 통합)
- VM (Versement Mobilité): 기업 교통세 (11인 이상 사업장 급여총액의 최대 2% 부과)



# 미국 MPO vs 프랑스 SYTRAL 비교

항목	미국 MPO	리옹 (SYTRAL Mobilités)
계획·운영 주체	MPO(계획)와 운영기관 분리 계획은 MPO, 운영은 별도 기관	SYTRAL이 계획·재원·위탁 일원화 단일 AOM이 전 과정 총괄
핵심 재원	연방 교부금(CPG) 70~80% 주정부 매칭 ~10%, 지자체 ~10%	기업 교통세(VM) 약 50% 운임수입 약 25%, 지자체 부담금 약 20%
국가 역할	재원(80%)을 통해 강한 정책 영향력 TIP/STIP 최종 승인권 보유	정책 법령·투자보조에 한정 일상적 운영 개입 없음
광역 범위	단일 주 내(SCAG 등) 또는 복수 주 경계(TPB 등)	단일 메트로폴 내 263개 코뮌 (약 1,870km²)
복수 행정구역 갈등	복수 주 MPO는 주정부 간 이해충돌·예산 협상 갈등 발생	메트로폴 단일 거버넌스로 행정구역 갈등 적음
운영기관	지자체별 개별 운영기관 병존 (Metro LA, BART, MTA 등)	DSP(위탁계약)로 Keolis Lyon RATP Dev에 위탁 프랑스 제2위 대중교통망(일 180만 명)
운영기관 재정	연방·주·지자체 재원 혼합 기관별 재원 구조 상이	SYTRAL이 단일 장구로 재원 배분 연간 예산 약 21억 유로(2026)
대표 사례	SCAG(캘리포니아, 단일주) TPB(워싱턴, 복수주)	SYTRAL Mobilités (리옹 대도시권)

시사점: 충청권은 복수 광역시·도 얽힘 → MPO형보다 SYTRAL형(단일 AOM) 거버넌스가 효율적일 수 있음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 V. 결론 및 정책제언



## V. 결론 — 충청권 광역교통의 방향

광역연합	행정통합	광역기구 (광역교통청)
광역문제 해결(국가) ×	광역문제 해결 (국가) ×	광역문제 해결 (국가+지방) ○
광역인프라 자원 지속성 ×	광역인프라 자원 지속성 ×	광역인프라 자원 지속성(조건) ○
기존 공동체 △	기존 공동체 △	기존 공동체 ○
핵심 사안 제외 예산·실행력 미흡	물리적 통합 기존 공동체 훼손	광역문제 해결 자원·운영 일원화

### 핵심 원칙

수계·교통망 등 지자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공동 사안은 말단까지 단일 운영체제로 계획·집행

## 정책 제언 — 충청권 광역교통 추진 전략



충청광역연합 세미나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임.  
yeong\_lee@hanmail.net

